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가장 시급”

김의겸 새만금청장

“미래가 달린 사업”

본격 재추진 의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해수 유통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청에서 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수 유통 확대, 마스터 플랜(MP) 변경, 기업유치, 전북자치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등 민감한 이슈도 피하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새만금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1.2GW 규모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RE100 산단을 구성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송전망 확보, 입지, 인허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송전망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김 청장이 청장 취임 이후 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본격적인 재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해수 유통 확대와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김 청장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살고 기업이 입주하려면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수질을 이대로 방치하면 개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 김 청장은 “성충화 현상 해소, 관리 수위 조절, 조력 발전 도입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수 유통은 현재 설정된 마이너스 1.5m의 관리 수위와 플러시 1.26m의 홍수위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수유통, 기술적 대안 검토중… 수질 개선에 집중

전북 미래 걸린 새만금 가동되도록 모든 역량 발휘”

해수 유통 해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구조물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현실적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지자체 간 관할권과 예산 배분 문제 등 지역 내 갈등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은 전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다. 파이가 커지기도 전에 누구 몫이 얼마냐는 식의 다툼부터 시작하면 전체가 손해”라고 말한 그는 “누구 한쪽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등 각 시·군이 요구하는 개발지분 확대나 관할권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새만금이 전북 모두의 미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자들이 제기한 ‘정치적 행보’나 ‘홍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김 청장은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새만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정상화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아직은 다른 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밖에서 새만금개발청을 볼 땐 쉽게 보였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 문제의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장은 지난달 19일 새만금 개발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커리어와 정치권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북자치도, 정치권, 지역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 21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28분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약 11시간 만에 귀가 시켰는데,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관개입 및 통일교 청탁 로비 △해외 순방길에 착용한 목걸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김 여사는 전날 주요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와 주요 의혹 사건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와 같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을 면담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전폭 지원할 것”

김윤덕 국토부장관,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공항 시설 개선 추진상황 점검… 후속 조치 주문

전북 출신인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인사청문회와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장관 공식적인 첫 번째 방문지로 무안공항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김 장관은 6일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부처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우선 먼저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헌화한 뒤 유가족 센터를 둘러봤다. 이어 그는 여객기 충돌 지점으로 알려진 공항 내 방위각 송신장비(로컬라이저) 문덕 현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레이더 설치 현황, 공항 시설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과제는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장관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유가족들의 애로

사항을 비롯,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에서 김 장관은 유가족들에게 사고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 등 장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사고 조사에 수반되는 추가 재원 마련 등 국토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취임 후 공식적인 첫 공개 일정으로 무안공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 사고에 대해 예방과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날 것”이라며 “사고 처리를 실무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유가족)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